

달랑 규제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 만들면 뭐하나

전남 전국 최다 35개 지정
재정 열악 투자 엄두 못내
2~3곳만 소기의 성과

재정·세제·기반시설 등
정부 지원 없인 성장 한계
道, 협의회 구성 활성화 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특례만이 아니라 재정·세제 지원은 물론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이후 곳곳에 지역특구가 지정됐지만 그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구를 가진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특구협의회를 구성, 활성화에 나섰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175개소의 지역특구 가운데 전남 22개 시·군에 모두 35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역특구는 일선 시·군의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지역특구 지정도가 가장 심한 전남의 각 시·군은 법 제정 이후 중소기업청을 통해 보리산업특구(영광), 전북 산업특구(완도), 농수산업특구(보성), 전지한우산업특구(함평), 섬진강기차마을 특구(곡성), 백산산업특구(화순) 등을 신청해 모두 35곳이 특구로 지정됐다. 경북(26곳)이나 충남(17곳)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일부 시·군의 지역특구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영광 보리산업특구의 경우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 및 관광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보리 재배 면적이 2012년 3470ha에서 2014년 3797ha로 9.4% 늘고 소득도 31억원에서 33억원으로 2.8% 증대돼 2015년 대상을 차지했다.

화순 백산산업특구는 녹십자, 생물의약연구센터, 화순전대병원 등이 밀집한 백산산업의 메카로, 2012년 매출액이 2827억원이었으나 2014년 4477억 원으로 58% 증가하고, 일자리는 46명에서 178명으로 132명이 늘어 2015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 특례 이외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시·군 자체 재정을 투입하도록 돼 있어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재정이 열악한 전남 시·군의 지역특구가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옥외광고물 완화, 폐교 사용 수의계약 허용, 견제율 완화 등의 규제 특례만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세제 지원, 정부의 선별적 지역특구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정정책 수립 시 지역특구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도록 해놓은 '규제특례법'도 보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우선 35곳의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청,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 전남상공회의소,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담당자를 자문위원으로 하고 각 시·군 지역특구담당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했다. 당면적 회장은 전남도 정책기획관이 맡아 신규 규제 특례를 상시 발굴하고, 지역특구의 운영 및 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

김명원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지역특구발전 협의회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발족한 만큼 지역특구를 통해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18묘지 36번째 기념식 채비 5·18 민주화운동 36주기를 일주일 앞둔 1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적십자 봉사원 200여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묘비단기와 조화 교체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임 행진곡' 아시아가 함께 부른다

5·18 학술대회 정근식 교수 '세계화 현상' 발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동아시아를 비롯, 세계적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국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바뀌며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는 13일 전남대 5·18 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세계화-홍공,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떻게 전국화되고 세계적으로 보급됐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학술대회에 앞서 공개된 주제발표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홍콩·대만, 중국,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불러지고 있다고 썼다. 국내 사회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원래 곡에 자신들의 학생·노동·주민운동 맥락에 따라 변형된 가사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확산했다는 게 정 교수 설명이다.

홍공의 경우 지난 1982년 학생운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돼 '애적 정전'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졌고 대만에서는 지난 1988년 한국에 다녀간 노동자를 통해 전파됐다고 했다.

정 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커다란 문화적 텍스트이자 사회 쟁점이라고 판단, 추모음악부터 시작해 사회운동음악, 의례 음악으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김지희기자 dok2000@

'임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하라

각계 단체 '광주공동체' 이름으로 촉구 선언문

광주지역 각계 단체들이 '광주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촉구했다.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 당선인 등 정치권 인사와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민주노총, 종교계 등과 함께 광주시청 잔디광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5·18 기념식을 둘러싼 갈등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넘어 5·18에 대한 폄하와 왜곡에 대한 광주의 서러운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공동체는 현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36주년 기념식이 차분하고 정중하게 치러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공동체는 "모든 역량을 쏟아 올려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겠다"며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함께 정중하게 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보훈처는 지금이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가보훈처는 여전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입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4·13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자리를 바꿔 얹힌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향해 호남민심에 물어봐?

총선 한달...2野 경쟁구도에 정치적 위상 높아져
교두보 확보 새누리도 김형식 영입 카드 등 검토

들을 선택했지만 총선 이후에는 정당 지지를 등에서 더민주에게 기회를 주는 전략적 지지 에 나서면서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전남은 물론 전북에서 교두보를 확보한 새누리당도 호남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전과 다르다. 노력하면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내부 평가다.

당장 당 내부에서는 장성 출신인 김형식 전 국무총리의 혁신위원장 영입 카드가 부

상하고 있다. 호남 카드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얽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 민심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더민주 독점구조의 틀에 묶어 있었던 호남 민심이 주도적으로 나서 정치판을 바꿔놓는 가늠할 힘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당장, 4·13 총선 경험을 토대로 호남 민심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방 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더민주와 국민의당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과거 1당 독점 구도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역 현안을 쟁기며 민심을 다지지 않고는 정치적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방 의원들 간의 경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4·13 총선에서 호남 민심의 선택은 중앙은 물론 지방 정치의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크다"며 "특히, 호남 민심의 향배는 내년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사는 광주 우리 함께
더불어 행복한 시인 우리 함께

행복한 광주공동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주민참여와 자치로 만드는
마을공동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키우는
교육공동체

더불어 함께 이용하는
공유공동체

희망을 서로 나누는
복지공동체

연대하고 협력하는
사회적경제공동체

노사민정이 대타협하는
일자리공동체

광주광역시
GWANGJU CITY